

# 폐기물관련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 상 겸\*

##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헌법국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
- III.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와 내용
- IV. 폐기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 포드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산업화·공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대량생산은 인간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면서 사회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이는 필연적인 대량소비로 이어지면서 점차 그 부작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량소비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차 대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시대는 양진영의 무한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환경훼손은 가속되었다.<sup>1)</sup>

특히 1970년대 이후 통신수단과 유통수단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하면서 전 세계를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버리는 세계화가 촉진되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소비로 인한 부산물인 폐기물의 증가와 이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고, 폐기물처리

\*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1)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였으나, 그 부산물로 나타난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삶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레이첼 카슨의 「봄의 침묵」(정대수 역, 넥서스, 1995)은 이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가 현대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세기 후반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한 우리나라 역시 환경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개발정책은 환경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공해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에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삶의 조건이 충족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점차 단순한 대기, 물, 토양 등 오염대상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오염원에 대한 논의로 들어갔다.<sup>3)</sup> 특히 경제활동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양적 급증을 가져왔고,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1회용품의 급증은 폐기물의 처리에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폐기물의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sup>4)</sup> 더구나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의 증가가 폐기물처리에 엄청난 부담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날로 쏟아지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전통적인 방식인 매장이나 소각 등 단순한 처리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폐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법제도를 중심으로 변천해 왔다. 폐기물을 단순한 오물로서 생각하였던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였던 1970년을 넘어서 1980년대 오면서 본격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1990년대 오면서 유엔환경회의를 통한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슬로건 속에서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단순한 처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원의 절약이란 점에서 재활용촉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시작되었다.<sup>6)</sup> 특히 2003년말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이 등장하였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쏟아지는 건설폐기물의 급증으로 매립지의 부족과 천연골재의 고갈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개별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21세기는 정보국가의 시대라고도 하나 환경국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의 문제

2) 이상규, 「환경법론」, 1998, 4면 이하 참조.

3) 이런 관점은 1990년대 개별환경법의 시대부터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4) 200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 포상제’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5) 이에 대해서는 홍준형, 「환경법」, 2001, 777면 참조.

6)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는 의제 21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명준, 「국제환경법」, 1997, 23면 이하; 이영준, 「국제환경법론」, 1995, 75면 이하; 홍준형, 「환경법」, 9면 이하 참조.

는 이제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에 주범인 폐기물처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핵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계속적인 폐기물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현실문제 속에서 기존 폐기물관련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폐기물문제에 대한 일반적 검토와 폐기물관련법제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헌법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먼저 이를 위하여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폐기물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하고,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고찰한다. 그 다음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헌법국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

### 1. 인류사회의 부산물로서 폐기물

#### 1) 환경오염원으로서 폐기물

인간은 하나뿐인 지구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영위해 왔다. 인간사회는 부단히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인간에게 환경의 문제는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특히 대량소비사회로 들어오면서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였고, 심지어 현대사회는 쓰레기사회(Abfallgesellschaft)라는 오명 속에 폐기물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sup>7)</sup>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과거 단순히 오물로만 취급을 받던 시절에는 처리에만 신경을 쓰는 정도이던 것이, 화학공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썩지 않는 유해폐기물이 증가하고 매립 등을 통한 자연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자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고, 그 처리자체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다.<sup>8)</sup> 더구나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거래는 환경오염의 국제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는 인류사회 공동의 문제가 된 것이다.<sup>9)</sup>

7) 홍준형, 「환경법」, 775면 참조.

8) 이미 우리는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 2) 폐기물관리를 위한 법제의 구축

환경보전은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치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책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훼손을 막고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면서 환경법은 독자적 범영역을 구축하였다. 환경오염원의 다양화와 복잡한 환경침해요인들은 환경법을 좀 더 체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폐기물관련법제는 이런 흐름 속에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화하고 있다.

## 2. 환경국가원리와 폐기물관리

### 1)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이며 최우선의 효력을 가진 법질서이다. 이런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기본원리는 헌법질서의 형성에 기초가 되며, 그 존재형태는 명문으로 존재 하건 헌법전 중에서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든 간에 국가와 국민이 준수하고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sup>11)</sup>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sup>12)</sup>

환경국가(Umweltstaat)라는 표현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등장한다. 환경국가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환경보호를 국가의 중요한 목표와 척도로 삼는 국가를 말한다.<sup>13)</sup> 국가공동체의 틀 속에서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삶의 조건으로 쾌적한 환경을 들 수 있다.<sup>14)</sup>

9) 유해폐기물의 국제화 문제는 1992년 바젤협약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동년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10) 김상겸,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2호, 2003. 9, 5면.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126면 이하.

12) 이 외에도 문화국가원리나 평화국가원리를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146면 이하; 홍성방, 『헌법학』, 2004, 174면 이하. 이런 보편적 견해에 추가하여 정보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강경근, 『헌법』, 2002, 261면 이하.

13)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in: M. Kloepfer(Hrsg.), Umweltstaat, Berlin u. a. 1989, S. 39ff.

오늘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환경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성장하였다.<sup>15)</sup>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하여 기본권형태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헌법은 환경과 관련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이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인 삶의 기초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서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환경국가원리는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sup>16)</sup>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기본원리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이며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환경국가원리는 다른 헌법상의 기본원리처럼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sup>18)</sup>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는 환경국가 틀 속에서 방향을 잡아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 2) 폐기물관리와 헌법규정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시켜 풀어가고 있다. 환경보호의 문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숙명적인 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sup>19)</sup> 실정헌법에 직·간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sup>20)</sup>

환경에 관한 헌법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여러 형태로 명문화하고 있다. 환경을 헌법에 수용하고 있는 국가를 유형별로 나눈다면 기본권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가의 목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21)</sup> 먼저 기본권 형식으로 헌법

14) 헌법의 생활규범성에 대해서는 허영, 「한국헌법론」, 2004, 28면 이하 참조.

15) Schulze-Fielitz, in: Dreier(Hrsg.), Grundgesetz, Art. 20a Rn. 6ff.

16) 이런 관점에서 고문현, “독일에서의 환경보호”,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2003. 11, 357면 이하 참조.

17) 헌재 1989. 9. 8. 88헌가6.

18) 물론 환경국가원리가 법치국가나 사회국가처럼 헌법규정을 통하여 하나의 국가원리로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9) Hofmann, Technik und Umwelt, in: Benda/Maihofer/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1994, S. 1005 Rn. 1.

20) 실제로 헌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홍준형, 「환경법」, 39면 이하 참조;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다 헌법적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문현, “환경헌법(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1호, 1999, 388면, 주 23) 참조.

21)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고문현,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2000. 1, 184면 이하 참조. 동인은 여기서 제3의 유형으로 기타의 결합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유형이라 생각한다.

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1972년 스톡홀름의 선언 이후 인간의 권리로서 환경을 보는 입장으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sup>22)</sup>

이와는 달리 국가목표규정으로 환경을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독일은 1994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본법 제20a조를 추가하여 환경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규정하였다. 국가목표규정은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목표를 정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헌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국가목표규정은 장래 국가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실현시기와 방법 등은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또한 국가목표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권조항과 구별된다.<sup>24)</sup>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헌법은 환경에 관한 권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 환경규정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하여 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하여 입법부에 위임하고 있다.<sup>26)</sup>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관리에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 폐기물관련법제의 헌법상의 근거 역시 동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 3. 경제헌법과 폐기물관리

#### 1)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폐기물관리

환경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다. 이미 리우선언에서 보듯이 지

22)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각 국가의 헌법체계에서 의하여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나뉜다. 고문현, 「환경법연구」 제21권, 1999, 390면 이하 참조.

23) Schulze-Fielitz, in: Dreier(Hrsg.), Grundgesetz, Art. 20a Rn. 20ff.

24) 김상겸,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3. 9, 5면 이하.

2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고문현, “환경권”, 「토지공법연구」 제13집, 2001. 11, 271면 이하; 문광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의 자연환경”, 「환경법연구」 제22권, 2000, 219면 이하; 홍성방, “환경기본권”, 「환경법연구」 제22권, 2000, 473면 이하.

26)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주택정책의무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었다고 보나, 주택의 문제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성방, 「환경법연구」 제22권, 2000, 488면.

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이 21세기에 있어서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이미 환경기준에 맞추어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sup>27)</sup> 온실가스 배출권 등과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여 환경의 경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sup>28)</sup> 특히 폐기물은 그 처리나 재활용문제에 있어서 어떤 환경정보보다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sup>29)</sup> 우리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30)31)</sup> 우리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내용을 통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조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을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27) 환경문제와 관련 자동차업계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생산은 회사의 사활을 건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적 디젤차의 생산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동아일보 2004. 2. 11). 나아가 기업들의 친환경제품의 생산은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차, 포스코, 유한킴벌리 등 업체는 제품생산의 전공정에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EU의 경우 2006년 발효되는 유해물질사용제한(RoHS·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 법안 등을 통해 부품 안의 유해물질까지 규제하는 쪽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동아일보 2003. 6. 25).

28)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2004, 11면 이하 참조.

29)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Wirtschaftsordnung)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으나, 경제질서를 정의하는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으로부터 출발한 경제질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운영방식 내지 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말한다. 나아가 경제질서는 경제의 의도적인 행위와 제도를 통한 실천적인 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질서라는 용어는 문헌에서 경제체제, 경제헌법, 경제방식 등 다양한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2000, 456면 이하 참조.

30) 우리는 1948년 헌법 이래 경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경제조항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강경근, 『헌법』, 2002, 267면 이하 참조.

31) 헌법의 영역에서 경제질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련된 헌법질서로서, 국민의 정치생활을 규율하는 정치헌법과 대비하여 경제헌법(Wirtschaftsverfassung)이라고 한다.

할 수 있는 수정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sup>32)</sup>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경제조항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본다면 헌법상의 경제조항 또는 경제관련 조항들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련법들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규정으로부터 부분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sup>33)</sup>

## 2) 자원의 재활용과 경제질서

1990년대 이후 폐기물관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감량하고, 나아가 재활용 내지 재이용하거나 소각을 통한 에너지로 회수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특히 재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 제정되면서 폐기물의 단순한 처리방식인 소각 또는 매립은 점차 축소되고 재활용을 위한 방법이 확대되었다.<sup>34)</sup> 최근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법제로서 재건축시장의 확대에 의한 폐기물의 증가를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와 함께 경제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와 내용

## 1. 헌법상의 근거

환경오염의 대상물로서 폐기물에 관련한 각종의 입법은 그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을 통하여 형성된 권리를 수용하여 1980년 이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은 삶의 존엄과 생활복지를 허용하는 양질의 환경 속에서 적합한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로써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나아가 국민의 의무도 명기하고 있다. 또한 헌법전문은 미래세대의 권리이기도 한 환경권을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32) 권오승, 「경제학」, 46면 참조.

33) 이런 관점에서 홍준형, 「환경법」, 86면 참조.

34) 고영훈, 「환경법」, 2000, 285면 이하 참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 역시 최저생계의 보장과 삶의 질적 향상이란 점에서 환경과 관련이 있다.<sup>35)</sup> 그 외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경제조항들인 제119조 제2항, 국토의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제120조와 제122조 및 지역경제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123조 등도 환경과 밀접한 관련조항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제1조에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35조 제1항, 나아가 헌법 제10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헌법상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그 목적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호조화를 예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의 촉진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역시 헌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국제질서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sup>36)</sup>

## 2. 폐기물관련법제의 역사

환경법제의 한 영역으로서 폐기물법제는 환경법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에서 폐기물법의 역사는 오히려 환경법의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일찍 출발하고 있다. 폐기물관련법의 역사는 크게 나누어 대략 오물청소법의 시대와 폐기물관련법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오물청소법의 시기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법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공해 정도로 머무르고 있을 때, 오물청소법 정도였다. 오물청소법에서 시작된 폐기물과 관련된 법제의 움직임은 다른 분

35) 홍준형, 「환경법」, 86면 이하 참조.

36) 1994년 가입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과 헌법 제60조 제1항과도 관련이 있다.

야와 달리 경제개발 속에서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하였다.

1961년 제정된 오물청소법은 청소개념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도시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중점을 두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계절적 청소지역과 특별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이 시기는 환경보전보다는 분뇨, 생활쓰레기 등 오물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개념에 기초하여 쓰레기를 인간의 생활영역에서 가능한 한 격리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위생법규였다.<sup>37)</sup> 따라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적인 규제가 없었다.

1970년대 오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80년 환경청이 신설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작되었다. 환경보전법 시대에 들어오면서 농촌의 폐비닐이 사회문제가 되자 1979년 말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여 원인사업자부담금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이 실시되었다.<sup>38)</sup> 이 시기부터 환경보전법에서 산업폐기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오물청소법과 함께 이원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산업폐기물처리의무가 부과되었다.

## 2) 폐기물관리법의 시대

1986년 제정되어 그 다음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폐기물관리법은 오물청소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와 환경보전법에 의한 산업폐기물관리부문이 폐기물관리법으로 통합되어 통일적인 폐기물관리체제를 구축한 시기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초기에는 제1조 목적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위생법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동법은 배출원을 기준으로 하여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일반폐기물과 배출산업체가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였다.<sup>39)</sup> 이 법이 제정된 시기를 전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폐기물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고물상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품의 수거가 중단되었고 모든 쓰레기는 매립으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한 쓰레기 위기는 결국 1991년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199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폐

37) 조은래, 「환경법」, 2000, 550면.

38) 이에 대해서는 강영훈,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21세기를 향한 대책”, 제주대 법과 정책 제7호, 2001. 8, 238면 참조.

39)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산업체에서 배출된 폐기물도 유해하지 않는 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경감시켰다.<sup>40)</sup> 또한 일반폐기물의 관리를 전국으로 하여 폐기물 광역관리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동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를 신설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과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하였고, 1992년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분법화를 추구하였다.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한 경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분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2000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2003년말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후적 폐기물관리에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예방적 폐기물관리로 전환하여 폐자원의 이용촉진, 제품의 재활용성 제고와 분리회수 촉진을 위한 재질분류표시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에서부터 폐기물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포장규제제도를 도입하였고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등도 도입하였다.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에 따른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님비(nimby)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을 도입하고 도시계획·택지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폐기물시설계획을 의무화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선정 및 시설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종전의 재산세 등을 과표로 한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제도를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종량적 수수료징수제도로 전환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는 등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의 감량화를 추진하였다.

### 3.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우리나라 폐기물관련법제는 초기 오물청소법의 시대에서 환경보전법을 통한 2원화 시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1원화 시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제발전과 소비급증으로 인한 폐기물종류의 다양화와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로 1990

40) 조은래, 「환경법」, 551면 이하.

년대부터는 각종 폐기물처리와 그 재활용을 위한 분법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폐기물관련법제는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시설·운영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최근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적합한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법체계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과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법 등 2원 체계로 전개되고 있다.

#### 4. 폐기물관련법제의 내용

##### 1)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련법제에서는 우선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폐기물이 아닌 다른 물건과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sup>41)</sup>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환경법의 범주보다 협소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제1호에서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분류하여 전자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지정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폐기물처리를 위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3조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현행 법규의 폐기물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서는 유해성 유무를 따져서 유해폐기물이 아닌 경우 생활폐기물이건 사업장폐기물이건 일반폐기물로 보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해 폐기물로 부르고 있다.<sup>42)</sup>

41) 정훈, “폐기물법상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2호, 353면 참조.

42) 조은래, 『환경법』, 553면 이하 참조.

## 2)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처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또한 처리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은 제6조에서 국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불법투기를 금지함으로써 일단 국민의 환경보존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소위 쓰레기 종량제를 규정하여 일반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제도는 사용자부담금제도의 일종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만큼 쓰레기요금을 부과하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다.

## 3) 환경오염방지의 수단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 소각 내지 매장 또는 해양에 방기 등 주로 버리거나 존재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강구되었으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활용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원의 재활용문제는 19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법은 특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강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전후하여 엄청나게 일었던 건축붐은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동산투기문제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에 대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논의는 2003년 말 관련법의 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 IV. 폐기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

## 1. 폐기물관련법의 문제

1990년대 이후 폐기물관련법제는 폐기물관리의 다양화를 통하여 세분화되고 있다. 관련법의 세분화가 현실적으로 폐기물의 과도한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탄력적인 법의 운영도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법으로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그렇지만 폐기물문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모든 주체가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분담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는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화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발생원이 많고 종류가 다양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체계화 통합화 등이 요구되고, 복합적인 폐기물처리와 관리를 위한 행정의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기관과 기업 및 시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필요하다고 본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의 정비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 2.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재오염 예방

현대산업사회는 경제활동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대량소비의 경향과 즉석용품의 증가에 따른 폐기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문제는 폐기물법체계를 정비하는데 핵심이라고 본다.

첨단산업의 발달과 1회용 유형의 소비품조의 확대는 환경의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강력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제의 정비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환경보존의무에 상응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련법제의 정비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방향과 국민과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미 외국은 자원의 재활용이란 관점에서 폐기물의 단순한 처리를 넘어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입법이 197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미국은 1976년 자원보전·재생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이 제정되었고, 유럽은 1975년 폐기물지침(75/442/EEC)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처리와 함께 재활용을 추진하였고, 이 규정은 1991년 개정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sup>43)</sup>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들어오면서 폐기물의 단순한 처리로부터 자원재활용이란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외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에 와서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43) 이에 대해서는 박수혁, “폐기물자원화 입법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논총』 제25권, 1999. 12, 211면 이하 참조.

헌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이나 재활용에 대한 입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여 폐기물의 저감과 자원의 소모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으로 인한 재오염의 문제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V. 맺음말

20세기 후반 국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폐기물의 양은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배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라고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의 증가는 더 이상 폐기물에 대한 단순처리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무용하게 되어 폐기물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에서 전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중 폐기물분야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및 시·도의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물론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헌법 제35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는 국민에게도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주체인 국민과 나아가 기업과 단체 등 각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야 한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선언한 의제21은 환경의 단순한 보전이나 보호만으로는 환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오히려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의 부산물인 폐기물관리에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불가피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로 환경과 개발의 양자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헌법이 환경국가원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의 규정은 폐기물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환경법의 총체적 체계 속에서 폐기물관련법제는 폐기물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가 주체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화 등 실질적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와 함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폐기물, 환경국가원리, 환경권, 자원재활용,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

## 【참 고 문 헌】

- 강영훈,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21세기를 향한 대책 -폐기물정책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7호, 2001. 8, 235-252면.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김세규·한귀현,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23집, 1997. 12.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 박수혁, “폐기물자원화 입법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도시과학논총」 제25권, 1999. 12.
- 이상규, 「환경법론」, 법문사, 1998.
- 정 훈, “폐기물법상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2호.
-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0.
- 최민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건설산업동향」 2002-18.
- 한귀현, 「독일환경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2.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
- 홍준현, 「환경법」, 박영사, 2001.
- Fritsch, Klaus: Das neue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recht, München, 1996.
- Hofmann, Hasso: “Umweltstaat”: Bewahrung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Schutz vor den Gefahren und Risik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in staatlicher Verantwortung, in: Peter Badura/Horst Dreier(Hrsg.),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Tübingen 2001, 873ff.
-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 20. Aufl., Heidelberg 1999.
- Kloepfer, Michael/Brandner, Thilo: Umweltrecht, 2. Aufl., München 1998.
- Scholz, Rudolf, in: Theodor Maunz/Günter Dürig(hrsg.), Grundgesetz, Stand 1996, Art. 20a.
- Schulze-Fielitz, Helmuth, in: Horst Dreier(hrsg.), Grundgesetz-Kommentar, Bd. 2, 1998, Art. 20a.

## 【Abstract】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Waste Disposal Act

Kim, Sang-Kyum

Late in the 20th century, as the international economy was activated, the amount of waste sharply increased. This is same as our case, doing economic activity, with manufacture in its center. The simple disposal of daily and industrial waste has come to limit and requires a turning point in waste disposal policies.

Korea has taken strong measures in the matter of waste disposal since the 1990s. The government made a “national waste disposal program” and implemented the first plan from 1993 to 2001. The second one is now in progress which is planned from 2002 to 2011. This plan is a long term plan based on Art. 8 Waste Disposal Act. It is one of the superior plans of Waste Disposal with Resource Recycling and the among the Long Assembly Plan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is is considered an innovative project in disposing the waste which is the main factor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course, the problems cannot be solved out only by government interference. Citizens and enterprises, who have the rights to environment and who are responsible for it, should actively correspond to the government policy. Agenda 21, declared in Rio-Convention in 1992,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we cannot protect nature just with simple preservation. We should rather be active by minimizing waste, recycling. Through these efforts, we can make the balance between environment and exploitations.

The 21th century is an era of environment. The Constitution does not define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But the basic directions are stated for comfortable life like the right to environment o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Within the whole system of Environmental Law,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to directions accepting the actual contents like a certainty of role division per subject, a systematization for the effectual propelling of disposal plan.

Also, along with the recycling of waste, we should present a clear criterion for facilities that enable efficient waste disposal process.